

저출산 유탄맛은 식품업계... 분유 대신 성인영양식

일동후디스 3~9세 '키요' 론칭
아이배넷 3~7세 전용식품 '꼬마'
매일유업 성인영양식 '셀렉스' 출시
CJ제일제당 40세 건기식 '리턴업'

식품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는 0~2세 영아를 포함해 3~7세 유아로 제품 대상으로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시니어푸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4일 통계청 '2018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의 출산율일 뿐 아니라 OECD 평균 출산율인 1.68명(2016년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신생아가 줄면서 업계의 우유류 생산도 줄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국내 식품산업 현황'을 보면 우유류 생산실적은 2018년 2조4232억원



매일유업의 셀렉스(위 왼쪽부터), CJ제일제당의 리턴업, 일동후디스의 키요. /각사

으로 전년 2조5893억원보다 6.4% 감소했다. 발효유류와 가공유류도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유가공품인 영·유아식 분유는 2018년 3692억원으로 전년 3965억원보다 6.9% 줄었다. 이에 업체들은 대상 연령층을 어린이로 확대하거나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산양 분유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동후디스는 3~9세를 위한 프리미엄 어린이 식품 '키요'를 론칭했다. 현재 국내 영유아식 제품의 경우 분유, 이유식 등 0~2세 영아를 위한 식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일동후디스 '키요'는 ▲비만, 성장을 고려한 고단백 &

저탄수화물 ▲국산 자연원료 그대로, 바른 입맛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필수기능성 원료 ▲쇼트닝과 같은 인공포화지방이 많은 경화유지 No ▲인공조미료, 팽창제, 색소 등 인공첨가물 No 등을 적용해 제품을 출시했다.

아이배넷은 지난해 3~7세 어린이 전용식품 브랜드 '꼬마'를 선보였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제품들의 주 소비층이 만 2세까지였기 때문에 고객층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다. 아이배넷은 유아식업체에서 아예 어린이식품종합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하는 시니어푸드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매일유업이 지난해 성인영양식 전문 브랜드 '셀렉스'를 출시하고 성인영양식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셀렉스'는 '영양전문가의 선택'이라는 브랜드 콘셉트에도 잘 드러나듯 50년 영양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매일유업이 성인들의 영양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해 주요 성분과 제품형태를 엄선했다. 셀렉스는 성인에게 부족한 단백질을 맛있고 간편하

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강화식이다. 음료 형태인 '마시는 멀티비타민'과 시리얼 바 형태인 '밀크 프로틴바', 분말 형태인 '매일 코어 프로틴'까지 제품군도 다양화했다.

CJ제일제당도 건기식 전문 브랜드인 '리턴업'을 선보였다. 국내 건기식 업계 최초로 40세 이후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건강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마트에이징' 브랜드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만나는 건강 밸런스'라는 의미를 가진 '리턴업'은 신체의 변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40세부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액티브시니어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건강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별 중심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연령별, 기능별로 제품군을 이원화 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점을 뒀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가을단풍 즐기는 나들이객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짙게 물든 단풍 아래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간편 여행자보험 등 혁신금융 53건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반년

상품 비교 대출신청자 3000명 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반 년만에 스위치를 켜고 고통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부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알뜰폰까지 '규제 프리'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절차를 줄인 여행자보험 상품은 가입이 70%나 급증했고, 상품을 비교해 대출을 신청한 이들이 3000명을 넘어섰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지난달 지정된 11건을 제외한 42건 중 15건의 서비스는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를 포함해 총 36건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12건은 추진일정에 따라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15건은 전산개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고 있지만 테

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는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온-오프 방식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놨다.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5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71%나 늘었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등에서 서비스를 출시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와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도 선을 보였다.

이날부터는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M)이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당국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테스트 진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전산설비 관련 보안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캠코법 통과... 한계기업 회생 '청신호'

법정자본금 한도 1조~3조 증액

1999년 이후 20년 만에 한도 확대 '체계개선' 사업수행 지원 신속해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숙원사업인 캠코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가계·기업의 재기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4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늘어난 건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정부위원회를 통과한 후 10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의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그간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라며 캠코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캠코는 금융사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기업 구조조정 업무, 국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NPL을 인수·정



문창용 캠코 사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주요 사업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캠코

리하는 식으로 자금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상시 구조조정기구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 납입자본금은 8600억원, 법정자본금 1조원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캠코는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경제 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지원하는 등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 이름도 금융사 NPL 처리 부분이 빠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존 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 법명인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과거 외환 위기 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캠코의 일부 기능만이 강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목적(경제주체 재기지원 및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과 업무조항 정비(기존 나열식이던 업무조항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등은 정부위 계류 중이다.

이밖에 캠코법 개정으로 내부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적자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했다.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문창용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9@